

## AI 인재 확보와 미래 안보

김인영(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부 교수)

## 강대국 정치의 귀환과 한반도:

### 트럼프 2기와 대북정책의 현실주의적 재구성

차태서(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AI 인재 확보와 미래 안보



김인영(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부 교수)

- 미국은 AI 선도국 유지를 위해 지속 투자하며, 노동시장 변화 대응과 AI 문해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음.
- 중국은 강력한 정부 주도로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2030년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함.
- 일본은 AI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하며, 반도체·AI 산업 투자를 통해 글로벌 AI 허브로 성장 중.
- 한국은 규제와 정치 불안으로 AI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며, 인프라 구축·인재 확보·R&D 투자가 시급함.

### 파리 AI 정상회의: AI 규제와 AI 기회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규제를 둘러싼 주요 논의가 진행되었다. 유럽연합은 AI 규제 법안(AI Act)을 도입하여 기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주도해 왔지만, 최근에는 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의 AI 기업인 미스트랄 AI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규제가 지나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의 AI 규제 기조와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부통령 JD 밴스는 자신은 AI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AI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발언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국의 AI 기술이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며, AI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제 막 시작되는 혁신적 산업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AI 기술이 노동시장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장 지향적 AI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미국 AI 정책 보고서: AI에서의 리더십

파리 AI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 국가 인공지능 자문위원회(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Advisory Committee, NAIAC)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가지 AI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에는 AI의 발전과 관련하여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경제 및 사회 전반에 AI의 혜택이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아래의 10가지 우선 순위 정책 방향을 보면 미국 부통령이 AI 정상회의 연설에서 AI가 국가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 1. AI와 노동시장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리더십과 투자가 필요하다. AI로 인해 노동시장에 변화가 발생하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단순히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식료품, 주거,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

### 2. AI 인식 및 리터러시

AI 문해력은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국민들이 AI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3. 교육에서의 AI 활용

AI는 교육 도구 및 커리큘럼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교육부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이 협력하여 AI 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AI 기반 교육 커리큘럼 및 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4. 과학 분야에서의 AI 활용

AI를 활용한 다학제적 과학 연구에 대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AI 연구 자금 조달 전략을 수립하여 과학 생태계 내 연구비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AI 연구 자금 조달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5. 보건 분야에서의 AI 활용

미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의료비를 훨씬 많이 지출하지만 국민 건강 수준, 의료 서비스 만족도, 행정 효율성 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료 행정 비용 절감 및 임상 품질 향상을 위해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도입해야 한다.

### 6. 정부에서의 AI 활용

AI 시스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배포를 위해 최고 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신속한 지침이 필요하다. 연방 기관 간 AI 시스템 역량 차이를 줄이고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 7.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를 위한 AI 활용

AI 도구 및 기술은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비용이 높으며 규제 준수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협력과 정부 주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 8. AI 거버넌스

미국의 AI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AI 안전성과 보안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AI 안전 연구를 지원하는 가이드라인 및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AI 평가 및 안전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9. 국민을 위한 AI

AI 기술의 발전은 상업적 성공을 우선시하는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 AI 시스템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생태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 발전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AI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이 상업적 성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 AI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 10. 법 집행에서의 AI 활용

국민들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AI 도구로 인해 개인 디지털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AI 기반 디지털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포괄적인 연방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 디지털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지원 정책

중국은 AI 기술 발전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정부 주도로 다양한 AI 연구소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기조는 중국의 국가적 개발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다. 2021년 3월 발표된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과학기술 강국 건설과 인재 개발이 핵심 개발 계획으로 포함되었다. 이 계획은 총 19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의 도입 부분인 1부를 시작으로 2부에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과 인재 개발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과학기술력 강화를 위해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연구 강화, 지속적인 기초연구 강화, 국가 주요 과학기술혁신센터 건립 등 과학기술 인프라의 발전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외국인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하며, 이를 위해 거주 및 체류 정책을 개선하고, 기술 이민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과학기술 인재의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혁신 능력, 연구 기여도 등을 반영한 인재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여 연구자에게 지속적인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혁신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소양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분위기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공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최고 지도층 다수는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배경은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대규모 장학금 및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 중국인 연구자들의 귀국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천인계획(Thousand Talents Plan, 千人计划)"을 시행하고 있다. 천인계획은 1994년 시작된 '백인계획'을 기반으로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2012년에는 '만인계획'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해외 거주 중국인 연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연구자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첨단 전략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접근 방식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파 없이 순수 중국 내 연구자들이 이룬 딥시크(DeepSeek)의 성공은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AI 인재 확보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일본의 AI 인재 육성 및 산업 전략

일본 정부는 AI 기술을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삼고,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발표된 'AI 전략 2019'에서 초·중·고등학생 100만 명과 대학·대학원 60만 명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확대하고, 연간 30만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일본은 세계적인 AI 인재를 확보하고 글로벌 AI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조기 AI 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이 추가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I'이 필수로 지정되었으며, 2025년부터 대학 입학 공통시험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직장인들이 AI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기업과 협력하여 AI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AI 활용 능력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국내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 고도 인재제도(J-Skip)'와 '미래창조인재제도(J-Find)'를 도입해 해외의 고급 인재들과 해외 명문 대학 졸업생들이 일본에서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해외 인재들이 일본 경제와 AI 산업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약 91조 원을 투입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글로벌 IT 기업들의 일본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오픈AI는 일본을 아시아 거점으로 선정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일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대만 TSMC와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생산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일본은 AI 및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AI 중심의 산업 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한국의 AI 경쟁력 강화 전략

한국은 강한 규제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 기본법 및 국회중언법 개정안과 같은 정책들은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정책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AI 및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AI 및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미국 부통령 JD 밴스는 “미국에서 최첨단 AI가 발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개방적인 규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혁신가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해왔다고 말했다. 또

한, 202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AI 분야에 약 7,000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미국의 성장 지향적 접근 방식은, 규제 강화로 인해 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있는 한국과 대조를 이룬다.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며, 인프라 구축, AI 인재 확보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AI 기술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연구하고 혁신시킬 인재의 확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AI 기술과 인재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부각되면서, 각국의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정보 통제 및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AI 패권 경쟁은 기술력과 인재 확보를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 딥시크의 급부상은 AI 인재와 기술이 단순한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딥시크의 기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감시 및 허위 정보 유포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한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는 AI 기술과 인재가 특정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낸다. 각국 정부는 AI 기술을 단순한 산업 도구가 아닌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AI 인재 양성과 유치에 박차를 가하며, AI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 또한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재 확보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포함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

# 강대국 정치의 귀환과 한반도: 트럼프 2기와 대북정책의 현실주의적 재구성



차태서(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근대적인 세력권 정치가 귀환하고 있다. 다극시대를 맞은 미국은 현실정치적 접근을 통해 해외 개입을 축소하고 미중러 3대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거래를 모색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목표도 기존의 비핵화에서 군비통제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한민국이 배제된 북미간 양자협상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한국도 CVID 의제를 고수하기보다는 군비통제 협상을 활용해 한반도의 위기 안정성을 확보하는 현실주의적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시대전환: 열강간 세력권 정치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의 낙승으로 결론지어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거시적 차원에서 현 국제질서의 국면적 특징을 분석해야만 한다. 미국 외교사의 궤적 속에서 볼 때, 2010년대 이래 국제정치 조건은 1970년대와 여러모로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트럼프 행정부와 리처드 닉슨 행정부 사이의 역사적 평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두 시기 모두 “제국적 과잉팽창” 이후 미국이 패권쇠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기존의 자유개입주의 패러다임을 탈피해 현실주의적 대전략 노선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된 계기였다는 점 때문이다. 즉, 1970년대가 지정학적으로 베트남전의 패배, 경제적으로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 등을 경험한 시기였다면, 2010년대는 테러와의 전쟁의 수렁과 지구금융위기를 경유한 시기였기에, 두 시간대 공히 미국의 패권국으로서의 성격이 시혜적 형태에서 강압적 형태로 퇴행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닉슨 독트린과 트럼프 독트린은

모두 해외 관여 축소와 책임 분담을 강조하며 강대국 간의 세력권 재조정 협상을 시도하는 특징을 공유한다. 특히, 대전략의 초점에 있어 이념 대결을 완화하고 다극 체제 아래에서의 현실정치적 타협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상대적 국력이 하강하는 시기의 미국으로서는 최대한 힘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장 사활적인 열강간 전략경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기 초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운하 운영권 환수, 캐나다의 51번째 주 병합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은 분명 제2차 세계대전 후 규칙기반질서의 근본 원칙에서 일탈한 처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말 미국처럼 힘에 의한 권력정치(Machtpolitik)를 대외정책 목표로 내건 것으로도 이해된다. 자유주의 패권이나 세계 경찰 역할에는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고, 단지 서반구 세력권을 공고히 하면서 북극권과 남미 등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침입을 구축하는데 워싱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궁극적으로 트럼프주의자들이 그리는 세상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대 강대국이 각자의 세력권을 구축하면서,

지정학적 거래와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19세기식 세력 균형체제(concert of power)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감히 미국의 최강국 지위(primacy)는 넘보지 못하게 하면서도, 열강들의 전면 충돌이 아닌 협상과 타협의 관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현실정치(realpolitik) 논리에 기반한 열강간 교섭과정에는 부수적 희생자(collateral damage)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점이다. 즉, 강대국 사이의 경계 획정을 위해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 놓인 중간국들이 “거대한 체스 게임”의 거래 대상으로 전략해 버리곤 한다. 즉, 1970년대의 데탕트가 그러했듯, 오늘날에도 비슷한 지정학적 타협 또는 그랜드 바겐이 미·중·러 사이에 이루어질 경우, 우크라이나와 대만 같이 강대국 간 이익권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한 나라들은 영토 분할이나 주권 제약 같은 중대한 손실을 감내해야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역시 이같은 지정학적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흡스적 국제정치 시대의 귀환을 두려운 마음을 품고 맞이할 수밖에 없다.

## 북한문제의 본질 변화와 군비통제론의 부상

지난 단극시대에 북한이슈는 자유세계질서 외부에 존재하는 “깡패 국가” 혹은 “악의 축”을 어떻게 처벌하여 교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법으로는 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상징되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부과나, 더 공세적으로는 정권교체 등의 처단방식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이 같은 자유 개입주의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 그 책임소재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전히 견줄 뿐만 아니라, 비핵화 달성은 고사하고 북한의 핵무력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강해 왔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오늘날 탈단극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북한문제의 본질에 있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관찰되고 있다. 즉, 북핵이슈의 성격이 핵확산(NPT) 레짐수호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안보규범의 문제에서 3개 강대국간 지정학 게임의 하위영역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평양은 모스크바와의 유사동맹조약 체결은 물론 대규모 전투

병력 파병까지 감행함으로써 기성 국제 제제망을 돌파하고 한반도 문제를 “신냉전”의 자장에 포함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 북한 수뇌부는 과거 중소분쟁기의 “등거리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외정책 노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미국 일변도 대외전략에서 탈피해 미중러간의 복합적 전략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추 외교”의 복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워싱턴 조야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어 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실주의적 “군비통제학과(arms control school)”가 부상해 왔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비정통 담론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핵탄두 생산 동결 수준에서 문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려는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하다. 이미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도 “중간단계 조치론(interim steps)” 등의 이름으로 이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슬며시 암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대선 기간 공화·민주 양당의 정강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공히 삭제되고, 당선 후 트럼프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지칭해 의미심장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기실 1기 때부터 트럼프 정부는 기성 미국 행정부들과는 전혀 다른 대북 접근법을 실험해 본 적이 있다. 기존 정책 결정자들이 앞서 설명한 자유 개입주의적 방식을 고수한 것에 반해, 트럼프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을 정당한 외교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상호간의 안보적 우려사항을 주고받기식 “딜”(deal)을 통해 해소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비록 하노이 회담에서 네오콘인 존 볼턴의 적극적 개입으로 북미간 타결이 무산되긴 하였으나, 북한 핵문제를 선악의 관점이 아닌 동등한 국가간 합리적 거래의 이슈로 정의 내렸다는 점에서 트럼프 1기 정부의 시도는 기존의 상궤를 벗어난 바 있다. 가령, 트럼프는 북한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NPT나 인권문제를 협상의제로서 거론한 적이 없다.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현실정치적 타협의 방법을 모색했을 뿐, 자유주의적 규범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2기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또다시 파격적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사실상 “전략적 인내 2.0”으로 일관한 바이든 정권과 달리 신정부는 외교정책 포트폴리오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좀 더 상향 조정할 것이다. 트럼프는 캠페인 기간부터 지금까지 김정은과의 특수 관계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과 같은 자신의 역사적 “유산”을 남기려는 의도로 북한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고려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특히, 불탄 같은 대북 강경파가 숙청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중동 등지에서의 분쟁해결 이후 본격적인 동아시아 세력권 재조정의 일환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강대국간 세력권 교섭을 증시하는 현실주의적 행정부가 평양을 베이징의 영향권에서 일부 이탈시키려는 유인책으로서 비핵화 의제를 포기하고 군비통제와 같은 모두스 비벤디를 추구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역키신저 전략”에 기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구냉전기 소련 견제를 위해 미중 데탕트를 이끈 키신저의 전략을 뒤집어서, 신냉전기 중국 견제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정리한 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이를 고리로 북미 데탕트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의 유일한 조약 동맹국인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당겨 마치 베트남처럼 다소간의 중립화라도 시킬 수 있다면, 불가능에 가까운 비핵화 목표는 포기하더라도 미중경쟁의 맥락에서는 큰 지정학적 이득이 된다고 워싱턴이 판단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런 미국의 새로운 접근에 북한 정권이 순순히 응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1기 트럼프 정권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지만 결국 확인한 것은 “언제 가도 변할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정책”뿐 이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김정은의 공식 답변이다. 특히 “자주세력권의 장성과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세력권의 립지가 급격히 약화되”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정세를 판단하고 있는 평양으로서는 당분간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다극세계건설”에 집중하면서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

## 탈단극 시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한편, 한반도의 안보환경 변동과 관련해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는 현 정권에서 기성 기득권층 (“blob”)의 자유패권 교리와 정반대되는 이단적 현실주의

의 독트린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기본적으로 역외균형을 주창한다. 이런 맥락에서 콜비는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는데, 가령,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비핵화 의제를 포기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왔다. 워싱턴 정책서클에서는 급진적인 소수파로 여겨져 온 의견이지만, 이런 소신을 강하게 피력한 인물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보정책 관련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는 결국 강대국 간의 지정학 경쟁이라는 현실주의적 논리가 한반도 안보이슈 전반의 성격을 재규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익숙해 왔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동맹 같은 개념은 부차적인 요소로 전락하고, 이제는 열강 간의 거대한 도박판 속에서 남북한을 하나의 패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계산법이 워싱턴 실력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주도의 자유세계질서라는 탈냉전시대 대한민국 대전략 패러다임의 기본전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관성적으로 지난 외교정책의 원칙들을 추구하는 것은 각주구점의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 유의해야 할 지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북핵해결의 목표치를 근본적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가령, 최근 발표된 미일정상회담 성명서, 한미일 장관급회담 성명서 등 공식문건에 “비핵화” 용어가 여전히 포함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는 국무부 등 “딥스테이트”가 아직은 관성적으로 문제를 관리하는 임기 극초반에 나온 표현들로서 실제 트럼프가 북한문제에 친히 개입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전변될 것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 개시과정에서 보듯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력권 획정과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 패싱”의 상황이 워싱턴과 평양 양쪽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면 북미 협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재고해야 할 시기가 왔다. CVID가 아닌 어떤 대안적 타협도 불가하다는 식의 태도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고 관련국 사이의 긴장도만 높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 양쪽

모두에 의해 통미봉남의 난국으로 몰릴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명시적으로 비핵화라는 장기적, 최종적 목표를 먼저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한반도의 위태로운 군비경쟁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군비통제 협상진행에 찬성하면서 그 과정에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용의주도하게 투입할 방도를 찾아야만 한다.

둘째,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 것에 더해 동맹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트럼프 행정부까지 재등장함에 따라, 자체 핵무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찬성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자구(self-help)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논리로만 보면, 미국의 핵우산도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이 진짜로 핵무장을 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세계가 이미 NPT를 비롯해 자유주의적 안보 관련 규범이 모두 무너진 약육강식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된다고 해서 결코 안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보면 양쪽이 핵을 가지게 된 뒤 “이제 대규모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소규모 분쟁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이른바 “안정-불안정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위기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북미 간 외교협상과 타협, 특히 군비통제의 프로세스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핵을 가지면 단번에 안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탈단극 시대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외교적 비전을 구축해 가는 일에 매진해야만 한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국방부 및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